

Market Intelligence

〈특집〉 2016년 세계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

I . 세계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

II . 신흥국 경제 전망 및 이슈

1. 2016년 신흥국 경제전망
2. BRICs 주요 정치경제 이슈
3.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과 신흥국 위기 가능성
4. 2016년도 유망 진출국 및 분야

III. 주요 산업 전망 및 이슈

□ (세계경제) 3%대 중반의 완만한 회복세 지속 전망

- 미국의 경기회복과 유로존의 점진적인 회복세로 선진국 경제는 2.2% 성장하고, 세계경제는 3.6% 성장할 전망

<세계 경제성장 전망(%)>

구 분	2015년	2016년 전망		
		IMF	OECD	LGERI
전 세계	3.1	3.6	3.3	2.9
선진국	2.0	2.2	2.2	1.9
신흥국	4.0	4.5	-	3.9

□ (신흥국) 국제금융시장 불안정성 및 정치적 변동성의 증가,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해 4% 중반 성장에 그칠 전망

- (아시아)¹⁾ 6% 초반 수준의 성장세 유지 전망

- 미국의 경기 회복, 소득 증가에 힘입은 내수시장 확대, 개혁 정책의 추진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등이 6% 초반의 성장세 유지에 기여
- 중국의 성장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, 인도, 베트남, 인도네시아는 경제성장세가 개선될 전망

- (중남미) 평균 1% 미만의 저성장 지속 전망

- 중미·카리브는 미국 경기회복에 힘입어 성장세가 개선되는 반면, 남미는 중국의 성장 둔화와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저성장 전망
- 멕시코, 칠레, 콜롬비아, 페루 등은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, 브라질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전망

- (중동, 아프리카) 저유가 여파에도 성장세 개선 전망

- 중동(MENA) 경제는 이란 경제제재 해제에 힘입어 3.8%, 아프리카(SSA) 경제는 비석유 부문의 성장으로 4.3% 성장 전망
-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, 사우디-이란 간 충돌 등 위험요소 상존

- (동유럽, CIS) 동유럽은 성장세 개선, CIS는 침체 지속 전망

- 동유럽은 유로존의 점진적인 경기회복에 따라 3.0%, CIS는 저유가 지속과 서방의 대리 경제제재 등으로 0.5% 성장 전망
- 러시아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며, 카자흐스탄은 성장세 둔화 전망

1) '신흥국'의 개념이므로 일본은 제외함.

1. [브라질] 재정을 둘러싼 정치·경제적 불협화음 지속

□ 정치권 내분 등으로 정부의 재정확충 대책 표류

- 정부는 증세와 긴축을 골자로 하는 재정확충 대책을 발표('15. 9월, 650억 헤알 규모)하였으나, 정치권의 내분, 노동계 등의 강한 반발로 제반 정책의 입안들이 의회에서 표류 중
- 2015년 10월 연방회계법원(TCU)은 정부가 사회복지 관련 추가지출을 위한 국영은행으로부터의 차입자금을 정부예산 항목으로 포함하지 않는 등 2014년 재정회계를 불법적으로 조작하였다고 판결, 의회에 당해년도 정부회계 내역 승인의 거부를 권고

□ 재정회계 조작 혐의로 호세프 대통령 탄핵 절차 개시

- 2015년 12월 2일 연방 하원의장은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정부회계법 위반을 사유로 대통령 탄핵 절차를 개시
- 다만, 탄핵 절차 개시는 정치적 갈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어 실제 탄핵으로는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우세

□ 재정정책 불확실성 확산에 따라 대외신인도 하락

- 2015년 9월 S&P는 재정 관련 불확실성 증대 등을 이유로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을 투기등급인 BB+로 강등 ⇨ 12월 Fitch도 브라질의 신용등급을 투기등급인 BB+로 강등
-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 상승, 이자비용 확충을 위한 공공투자 감소 및 공공부채 증가의 악순환 ⇨ 국영 석유회사 Petrobras의 비리 스캔들에 따른 사업 축소로 민간투자 위축 전망

□ 대내외 환경악화로 단기적 경기회복 난항 전망

- 대내적으로는 Petrobras 비리 사건으로 인해 인프라 투자가 위축되고 대통령 탄핵 논의로 정부의 정책추진력이 약화되었으며, 대외적으로는 미국 금리인상 가시화,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 등에 직면하여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 개선은 어려울 전망

2. [러시아] 경제성장 둔화 극복을 위한 대외적 노력

□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·EU의 대 러시아 제재 지속

- 러시아의 크림 반도 무력합병(2014년 3월)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서의 정부군과 러시아계 반군 간의 충돌(2014년 4월) 이후 미국과 EU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시행 중
- 민스크 회의(2014년 9월, 2015년 2월)에 따른 합의 후에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무력충돌이 지속되었으나, 2015년 말 현재 소강상태
⇒ 2016년 1월 말까지인 EU의 제재조치 연장 여부 주목

□ 국제유가 하락으로 2015년 마이너스 경제성장 추정

- 2011년 이후 러시아의 경제성장은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과 서방의 경제제재 시행으로 계속 둔화 ⇒ 2015년 -3.8%, 2016년 -0.6%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전망
- 성장 둔화는 국제유가 급락과 서방의 경제제재 외에도 경제현대화와 산업다변화 정책의 성과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⇒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

□ 신흥국 및 CIS 내의 경제협력 강화

-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제재에 맞서고자 2015년 7월 BRICs 정상회담과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담을 연달아 개최하는 등 중국, 중앙아시아, 브라질 등 신흥국가들과의 대외협력 강화
- 2015년 1월 러시아, 카자흐스탄, 벨라루스에 의해 창설된 유라시아경제 연합(EAEU)에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즈가 추가 가입 ⇒ CIS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다시금 확대

□ 동북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극동러시아 개발 적극 추진

- 러시아 정부는 극동러시아 지역에 경제특구 형태의 선도개발구역을 지정하여 농업, 에너지, 물류, 제조업 분야 개발 추진 중
 - 2015년 2월 1차 개발구역 3개소, 4월 2차 개발구역 6개소 지정
- 극동러시아 항만 개발을 통하여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동북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운송물류 루트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 추진 중

3. [인도] 모디노믹스 추진으로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동력 증강

□ 모디 총리, 취임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개혁 추진

-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2014년 5월 취임 이후 관료주의 타파, 인프라 개발, 기업환경 개선 등 친시장적 정책을 통해 경제구조 개편과 정부 신뢰 회복을 추진 중
 - 2015년 1월 기획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개조기구(NITI)를 설치 ⇨ 중앙정부와 주 정부 간의 협력 및 민간 참여 확대
- 재무부와 인도중앙은행(RBI)과의 정책공조를 통해 명확한 목표 물가 상승률 제시 ⇨ RBI는 재정건전성 확보와 물가 안정을 목표로 거시경제 안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한편, 2015년 중 3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에 효과적으로 대응

□ 모디노믹스 추진에 따른 거시경제 안정

-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모디 총리가 취임한 2014년 7%대로 진입하여 2015년에는 7.3%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 ⇨ 일시적 호황이 아닌 경제체질 개선의 결과로 평가받음
 - 재정 긴축과 세수기반 확대를 통한 재정수지 적자 감축 노력 지속, 농산물·원자재 가격 안정과 효과적 통화정책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화, 외국인투자 유치로 외환보유고 증가 등의 성과

□ 최근 정부의 주요 개혁안이 국회 표류 중

- 인도 정부는 기업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노동법 및 토지수용법 개정, 통합부가가치세(GST)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, 상원 내 여당의 열악한 입지로 인하여 입법 추진에 어려움
 - 노동법 개정에 대한 노조와의 협상은 난항 지속, 토지수용법 개정안은 야당과 농민의 반대에 직면, 통합부가가치세 도입안은 세율과 예외 조항 등의 문제로 여름회기 내 상원 통과에 실패

□ 거시경제 안정세는 지속되나, 상원 내 정치적 열세가 걸림돌

- 2016년에도 인도 경제는 5%대의 안정된 물가상승률과 함께 인프라 투자, 개혁 추진 등에 힘입어 7.5%의 경제성장을 시현할 전망
- 다만, 상원 내 여당의 열악한 입지는 신속한 개혁정책 추진에 계속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,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은 GST 도입은 2015년 겨울 회기 내 의회의 승인 기대

4. [중국] 제13차 5개년 계획으로 본 신성장 패러다임

□ 중국 정부, 향후 5년간의 경제성장 로드맵 제시

- 중국은 2015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향후 5년간의 중국 경제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'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에 관한 13차 5개년 계획 건의(안)'을 논의
 - 신성장 동력의 확보를 목표로 소비와 서비스 중심의 성장체제 완비, 제조업 및 국유기업의 구조개혁 추진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

□ 소비와 서비스 중심으로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

- 지속적인 중속성장의 달성을 위해 기존의 투자와 제조업에서 '소비와 서비스업' 중심으로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시도 ⇨ 외연적 성장보다 소비와 서비스 주도의 균형성장에 중점
 - 임금 인상과 소비환경 개선 등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 및 소비 촉진, 의료·교육·양로 부문 개방을 통한 서비스업 활성화 등 추진

□ 강도 높은 구조개혁 추진과 3대 전략사업 추진

- 중국 정부는 최근 국내외 수요감소로 설비가동률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투자를 통한 양적 성장을 지양하고, 제조업 및 국유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 추진을 통한 문제해결에 중점
 - 일대일로, 베이징-톈진-허베이 공동발전, 장강 경제벨트 등 3대 전략 사업을 2016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

□ 최근의 증시 불안정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

- 2016년 1월 들어 상하이 증시 주가 급락세 : 최근 미국 금리인하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위안화 가치를 1% 이상 절하한 결과로 분석됨
 - 개인투자자 비중(거래량 기준)이 전체의 80%를 상회하는 중국 증시 특성상 주가하락세 지속시 '소비와 서비스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' 전환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
- 이에 중국 정부는 유동성 완화 및 재정지출 확대 지속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한편, 자본시장 개방을 위한 증시 부문의 개혁으로 외국계 자금 이탈 방지, 투자심리 회복 등을 도모할 계획

1.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확산, 범세계적 리스크 요인으로 대두

□ IS(이슬람국가)의 대규모 테러 공격, 중동에서 유럽으로 확산

-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 IS(이슬람국가)는 추종세력의 규합을 위해 2015년 하반기부터 세계 각지에서 대규모의 동시다발적 테러를 자행
- 10월 31일 발생한 이집트 시나이 반도 상공의 러시아 여객기 폭발 참사, 11월 13일 발생한 프랑스 파리 테러 참사는 IS의 대규모 테러 대상이 중동에서 유럽으로 확산되는 상황임을 보여줌

□ IS, 근거지를 리비아로 옮길 가능성: 유럽에 대한 위협 가중

- IS의 거점인 시리아에 대한 서방 연합군의 대대적 공습이 이어지자, IS는 내전으로 무정부 상태인 리비아의 지중해 연안 Sirte를 점령·통치하며 조직원 수를 늘리고 있음
 - IS가 유럽 본토로 공격을 확대하고자 Sirte를 전초기지로 활용한다는 분석 ⇨ 유럽 등 서방 세계에 더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
-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충돌로 촉발된 중동 지역의 종파 갈등 악화는 IS 격퇴를 위한 공동노력에 장애물이 될 것으로 우려

□ 테러 확산이 신흥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: 무역과 투자의 위축

- 파리 테러의 후유증으로 인한 생겐 조약 개정과 그에 따른 내부국경 통제 강화는 EU 국가들 간의 물류 저해 ⇨ EU의 역내무역 저해는 물론 신흥국들을 포함한 역외국들로부터의 수입에도 악영향을 미쳐 세계무역의 활성화를 저해할 위험
- 나이지리아 등 테러 위협이 특히 고조되는 중동·아프리카 신흥국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입 저해로 인해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다각화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
- 테러의 범세계적 확산은 선진국과 신흥국을 막론하고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여, 궁극적으로는 세계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제기

2.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: 중국, 주변국 및 미·일과 대립 심화

□ 중국, 주변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심화

- 최근 중국은 에너지 안보 강화, 해상교역 거점 확보 등을 목적으로 남중국해에서의 해상영향력 확대를 도모 ⇨ 2014년 이후 베트남과 필리핀 사이에 위치한 난사 군도(Spratly Islands) 내에 7개 인공섬을 건설하여 ASEAN 국가들과의 영유권 분쟁위기 고조
- 남중국해는 풍부한 에너지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외에도 전 세계 해상무역량의 40% 이상이 통과하는 곳으로, 아시아 해상기지 건설을 위한 핵심 거점
- 대부분의 ASEAN 국가들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해상영향력 확대 방침에 대해 강경한 입장 : 특히 필리핀·베트남은 동 해역의 영유권 분쟁으로 중국과 극심한 대립관계
- 필리핀은 중국의 영해권 침해 문제로 2015년 7월 UN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중재 요청 ⇨ 최근 중국의 인공섬 건설로 반중 정서 고조
- 베트남은 2009년 중국과의 육상국경선은 확정했으나, 해상국경선은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분쟁 중

□ 미국·일본의 영유권 분쟁 개입으로 군사·정치적 대립 양상

-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아시아·태평양에 대한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여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동남아 국가들을 지지
- 중국은 2011년 '아시아 회귀'(Pivot to Asia) 정책을 표명한 미국, 2013년 이후 센카쿠 열도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과의 군사·정치적 대립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양상

□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분쟁 장기화 전망

- 중국은 남중국해 해상영유권 분쟁으로 베트남, 필리핀 등을 포함한 ASEAN 국가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으나, 밀접한 경제협력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군사적 충돌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
- 미국과 일본이 동 해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개입함에 따라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

중 국

(소비재,
서비스)

- 중국은 성장 패러다임을 기존의 투자와 제조업에서 '소비와 서비스업'으로 전환하여 내수 촉진을 추진
 ⇨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품목별 전략을 수립, 소비재 수출 확대 필요
- 최근 중국에서 급성장 중인 신소비(온라인·미디어·뷰티·헬스케어), 교육, 의료, 레저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유망 서비스 산업 분야를 선점할 필요

인 도

(제조업,
인프라)

- 인도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인 'Make in India'의 추진에 부응하여 향후 중국을 대체하는 글로벌 생산거점으로서의 제조업 부문 투자 진출 적극 추진 및 내수시장을 겨냥한 소비재 수출 확대 필요
- 또한 스마트시티(Smart City)와 산업회랑(Industrial Corridor) 계획에 의한 대규모 장기 인프라 건설 사업 등에의 진출도 적극 고려 필요

인도네시아

(인프라,
CEPA)

- 인도네시아 정부의 개혁정책에 따라 항만, 공항 등 인프라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나, 자국 산업 보호로 금융, 자원 등 분야에의 진출은 제한
 - 양국간 CEPA*(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) 체결 협상의 빠른 재개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, 인도네시아의 중점육성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
- * 2012년 7월에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주요 관심품목에 대한 양허문제, 서비스·투자 부문의 우리 기업에 대한 보호수준 등의 입장 차이로 타결 지연 중

베트남

(소비재,
생산거점)

- 인구 대국(9천만 명)인 베트남은 최근 고성장으로 중산층이 확대되며 신형 고소득층과 젊은층을 중심으로 고급 소비재 구매 증가 ⇨ **가전제품, 식음료 등 소비재 수출 확대 필요**
- 베트남은 풍부한 저임 노동력과 안정적인 제조업 기반 보유 ⇨ 투자 확대를 통해 베트남을 동남아 시장의 진출을 위한 생산거점으로 활용할 필요
 -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(15~64세)의 비중이 70% 이상이며, 동 비율은 2025년까지 계속 확대 전망

러시아

(EEU,
극동개발)

- 러시아가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**유라시아경제연합(EEU)**의 가입국이 점차 증가하며 유라시아 지역 내 영향력 확대 ⇨ **EEU와 FTA 체결 검토 필요**
- 러시아는 극동러시아 지역의 **항만 인프라, 농업, 수산업, 광공업** 등에 대한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 ⇨ 우리 기업은 동 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한 유라시아 물류 활성화나 식량 자립도 증대 고려 가능

이란

(소비재,
인프라)

- 제재 이전 우리나라의 대 이란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, 철강제품 등과 함께 가전제품, 식음료, IT, 보건 등 **다양한 소비재 및 서비스 품목의 수출 확대 기대**
- 이란은 제재 이전 우리나라의 6대 건설시장 ⇨ 제재 해제 후 석유·가스전 및 **인프라 개발 등에 재진출시 수혜 기대**
 - 국내 기업들의 가격·품질 경쟁력 확보 전략 수립, 현지 네트워크 점검, 정부 차원의 우호적 통상환경 조성 등 사전 준비 필요

확인자

소장 권 우 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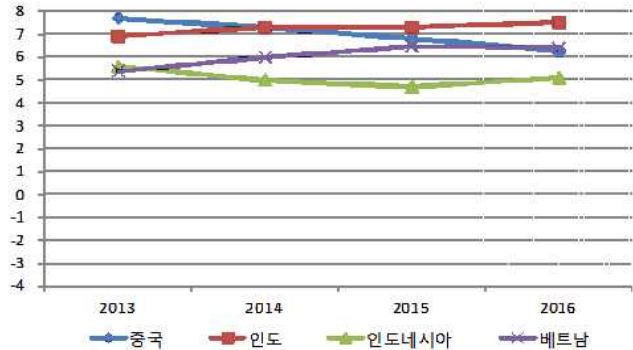
작성자

선임조사역 오 경 일

<참고 1> 주요 신흥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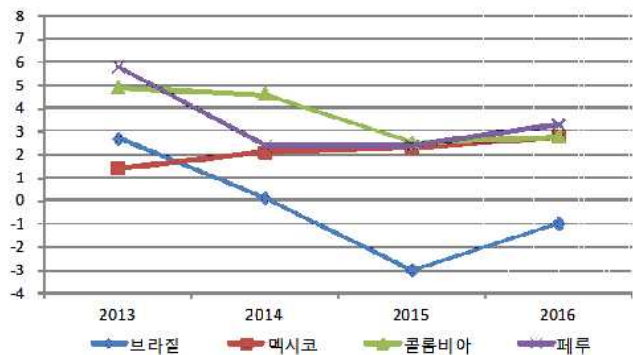
< 아시아 >

(단위: %)	2013	2014	2015 ^e	2016 ^f
아시아신흥국	7.0	6.8	6.5	6.3
중 국	7.7	7.3	6.8	6.3
인 도	6.9	7.3	7.3	7.5
인도네시아	5.6	5.0	4.7	5.1
베 트 남	5.4	6.0	6.5	6.4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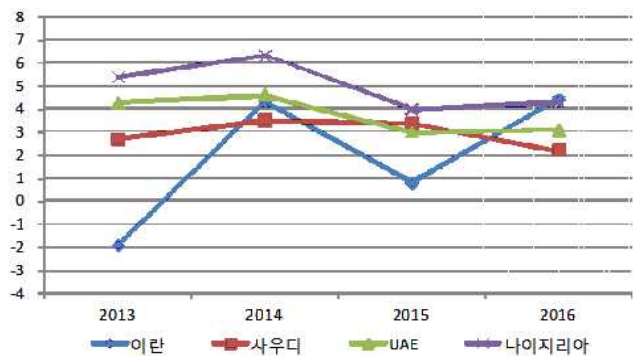
< 중남미 >

(단위: %)	2013	2014	2015 ^e	2016 ^f
중 남 미	2.9	1.3	-0.3	0.8
브 라 질	2.7	0.1	-3.0	-1.0
멕 시 코	1.4	2.1	2.3	2.8
콜 롬 비 아	4.9	4.6	2.5	2.8
페 루	5.8	2.4	2.4	3.3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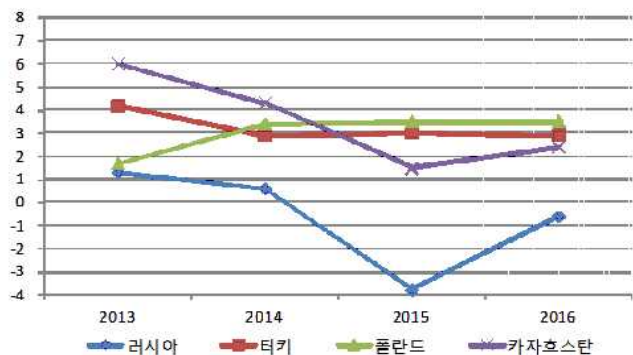
< 중동·아프리카 >

(단위: %)	2013	2014	2015 ^e	2016 ^f
M E N A	2.1	2.6	2.3	3.8
S S A	5.2	5.0	3.8	4.3
이 란	-1.9	4.3	0.8	4.4
사 우 디	2.7	3.5	3.4	2.2
U A E	4.3	4.6	3.0	3.1
나이지리아	5.4	6.3	4.0	4.3



< 동유럽·CIS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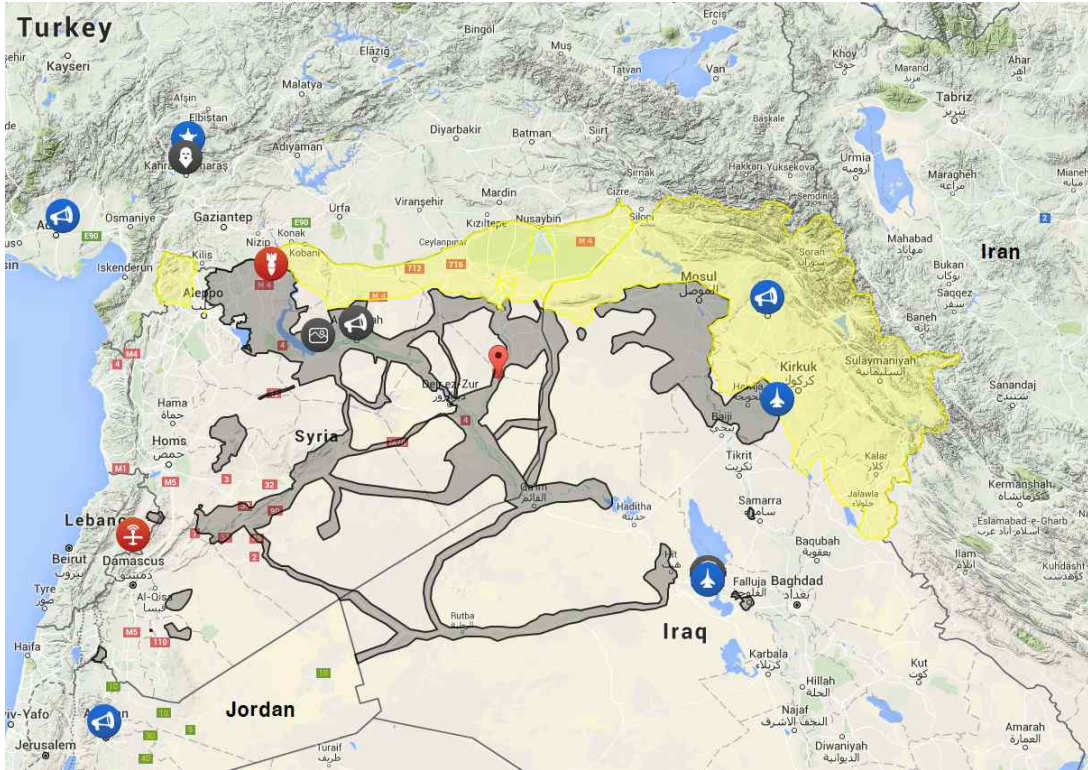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	2013	2014	2015 ^e	2016 ^f
동 유 럽	2.9	2.8	3.0	3.0
C I S	2.2	1.0	-2.7	0.5
러 시 아	1.3	0.6	-3.8	-0.6
터 키	4.2	2.9	3.0	2.9
폴 란 드	1.7	3.4	3.5	3.5
카자흐스탄	6.0	4.3	1.5	2.4



2) IMF World Economic Outlook, October 2015.

<참고 2>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지역

< IS 점령지역 >



회색 부분: IS 점령지역 / 노란색 부분: 쿠르드자치정부 군사조직 등 장악지역

< 남중국해 긴장 고조 지역 >



① 외환시장

구 분	'15년말	'15. 12. 28	'16. 1. 4	전주비
₩/US\$	1,172.5	1,169.6	1,187.7	18.1
₩/100¥	974.1	972.2	995.1	△22.9
CNY/US\$	6.4912	6.4887	6.5354	0.0467
¥/US\$	120.4	120.3	119.4	△0.9
US\$/€	1.0930	1.0972	1.0895	△0.0077

② 채권시장

구 분	'15년말	'15. 12. 28	'16. 1. 4	전주비
한국 국고채(3년)	1.66	1.68	1.63	△0.05
미국 국채(10년)	2.2694	2.2322	2.2428	△0.0106

③ 주식시장

구 분	'15년말	'15. 12. 28	'16. 1. 4	전주비
한국 KOSPI	1,961.31	1,964.06	1,918.76	△45.3
미국 DJIA	17,425.03	17,528.27	17,148.94	△379.33

④ 해운시장

구 분	'15년말	'15. 12. 28	'16. 1. 4	전주비
BDI 지수*	478	478	473	△5
HRCI 지수**	449***	-	-	-

*Baltic Dry Index: 벌크선 운임지수

**Howe Robinson Container Index: 컨테이너선 용선지수

***'15. 12. 23일 수치임.

⑤ 국제유가

(US\$ / 배럴)

유 종	'15년말	'15. 12. 28	'16. 1. 4	전주비
텍사스유 현물	37.04	36.81	36.76	△0.05
브렌트유 현물	37.28	36.62	37.22	△0.6
두바이유 현물	32.19	32.61	32.54	△0.07